농식품부, 농지 보전 의지 있나?

지난 10년동안 서울·인천 면적 농지 사라져… 김종회 의원 "식량자급력 향상 핵심으로 정책 소속 시행을"

지난 10년 동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의 농지가 사라졌음에도 농지보전에 대한 농식품부 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4,941ha로 연 평균 1만 5,500ha가 전용됐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매년 여의도 53.4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농지전용 면적 24.1%(2만6,361ha)를 차지했고, 경남 13%(1만4,137ha), 경북 11.7% (1만2,781ha), 전남 10.6%(1만1,664ha), 충북 9.8%(1만657ha) 순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 (6만182ha)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18%(2만7,980ha), 광·공업시설 14.2% (2만2,074ha), 농어업용 시설이 4.6%(7,100ha)였다.

문제는 2017년에 농식품부 장관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189ha로, 2014년(1,477ha)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43%에 이르렀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식량자급률 목표 제고와 농지보전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농림부는 전체 전용 농지의 43%를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있어 핵심요소로, 지속적인 경지면적 감소는 식량자급력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농지보전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 전국 장애인위원회 시도당위원자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 위원회 시도당위원장 및 지방의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래된 쌀 사료용 판매 3년 손실금 1조8758억

정운천 의원 "국민세금 줄줄 국민정서상 맞지 않아"

쌀 재고 증가에 따라 오래된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8,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6,352억원에 이르고, 사료용으로 판매하기까지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도 2,406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고미)를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톤에 달하며,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할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도에도 2012년산 쌀을 kg당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으며, 매입단가는 2,171원이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8월말 기준 16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는 최대 186만톤에 달하기도 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우리나라 쌀 적정재고량은 80만톤(연간 소비량의 17~18%)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kg으로 지난 2008년 75.8kg 대비 18%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51kg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 재고 급증에 따라 정부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236억원, 올해는 9월까지만 3,017억원이다.

정운천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으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의 피땀이 배어 있는 소중한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의 정책실패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도의회 성경찬·김만기 의원,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는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논의 중에 있지만 정작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고창군·부안군민 그리고 전북도민의 안전장치 마련에는 뒷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35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경찬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사진)·김만기(고창2·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전북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강력 요구한다"면서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계획이 없는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마련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지역 주민의 범위는 형식적인 행정구역의 관점을 벗어나 국제기준이자 법적 기준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를 원자력발전소 주민의 공식범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전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정확히 산정해 이를 어떻게 최종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경찬 도의원은 이번 결의안 제출 배경에 대해 "정부가 2017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재검토 준비단'을 발족시키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원전을 가동해왔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원전 인근 주민들을 이중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검토 준비단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검토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원전 소재지 행정구역으로만 한정해선 안 될 일"이라며 "고창군은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로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또다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고통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형 농업 공익형 직불제 도입 시행해야"

김만기 의원 5분 발언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전, 경관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그 가치와 역할에 있어 공공재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보존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252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지난 2017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했고, 50% 가량이 세금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헌법 개정안에서도 명문화되었다며 이미 모든 국민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을 지키는 모든 책임을 농민들 몫으로만 남겨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며 "이제껏 소외받고 희생만 강요당해온 농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기 위해 전북형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비안도 도선운항 전북도 중재 리더쉽 보여줘야"

나기학 의원 5분 발언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사진)은 26일 제35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비안도 도선운항에 대해 시·군과 어업인의 협의가 이뤄졌으므로 앞으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비안도와 두리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2년 동안 뱃길이 끊겨 182세대 358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소형어선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어선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관광객 극감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 수많은 주민들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매립 토지와 관련한 군산시와 부안군의 갈등과 오래된 어업갈등을 이유로 해결책을 못 찾고 고스란히 비안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가력선착장에서 비안도간 도선운항에 군산시·부안군 및 어업인, 비안도 주민 간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안)을 마련하면서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군산시와 부안군, 그리고 어민간의 대승적인 협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전라북도가 키를 잡고 어업활동의 갈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들의 오랜 고통의 나날들을 끝내고 해묵은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적거렸던 태도는 버리고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맏형으로써 중재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